ISSN 2982-9283

동북아역사리포트

동북아역사재단 | 2024. 4. 15. | Vol. 62

#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박영준_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목차 |

1. 들어가는 글
2. 일본제국의 군국주의화와 전쟁 요인들
3. 21세기 일본의 안보 정책 및 안보 전략 문서 평가
4.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박영준**_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 1. 들어가는 글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국가방위 전략』,『방위력 정비계획』등 3가지 안보 전략 관련 문서들을 공표하였다.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이나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를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문서들에는 기존에 표방한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y)' 보유가 명문화되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정거리 1,000km에 달하는 지대함·함대지·공대지 미사일 획득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전에 방위예산을 GDP 대비 1% 이하로 제한한다는 암묵적인 합의는 현재 5조 엔 규모에서 향후 5년에 걸쳐 8.9조 엔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전환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찬반양론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반응도 다양하다. 우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중국과의 글로벌 전략 경쟁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면한 미국으로서는 동맹국 일본이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본 것이다.

반면 한국의 반응은 다소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안보전문가들은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가 중국의 해·공군력 증대와 공세적인 대외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공세적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반해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혹은 '군사대국'이 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론"은 사실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통념에 가까운 것이다.

필자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일본제국의 전쟁사를 분석한 바 있고, 동시에 현대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

를 추적해 왔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론”에 입각한 현대 일본 안보 정책 평가는 초점을 잘못 맞추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군국주의를 가능케 한 조건과 요소를 냉정하게 고찰하고, 그것들이 현대 일본에 작동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론”은 그러한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근대 일본의 군국주의와 대륙 팽창을 가능케 한 요소들은 무엇이고, 이에 비추어 현대 일본의 안보 정책 대전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본 소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기자회견 하는 기시다 日 총리

## 2. 일본제국의 군국주의화와 전쟁 요인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대외전략을 공격적으로 전환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야기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다. 일제가 일으킨 전쟁들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이 ‘사무라이 국가’라는 국가적 전통과 ‘문’보다는 ‘무(武)’를 숭상한 국민성에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임진왜란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분석했고, 향후에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분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 같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동서고금의 전쟁 발발 원인을 인간, 국가, 그리고 국제체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처럼 일제가 일으킨 전쟁을 분석하였다.[1]

그에 따르면, 청일전쟁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까지 일본이 주도한 6차례 전쟁의 첫 번째 요인은 각 시기마다 팽창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외정책을 주도한 정치가 혹은 군인들이 있었다는 점이다.[2]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시기에는 근대 일본 군사체제의 건설자로 평가받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존재했다. 그는 메이지 시대를 거치면서 줄곧 대외안보에 필요 과제로 육·해군 건설과 전력 증강을 강조하였

1 Kenneth N. Waltz, 1959.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 박영준, 2020.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 사회평론아카데미.

다. 특히 1890년 총리로 선출되면서 일본이 그 본토를 의미하는 '주권선'뿐만 아니라, 주권선 방위에 불가결한 '이익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익선은 다름 아닌 한반도였다. 이러한 그의 전략론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중국의 병력 파견에 대응한 일본의 동시 파병으로 이어졌고, 청일전쟁 발발의 계기가 되었다. 러일전쟁 직전에도 러일협상을 주장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달리, 러시아와의 결전 불가피론을 주도하면서 영일동맹을 준비했다.

만주사변 시기에는 일본 육군의 엘리트 장교로서 육군대학 교관과 만주 관동군 참모를 역임한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가 있었다. 그는 1920년대 육군대학 교관 시절 강의와 저술을 통해 동양문명을 대표하는 일본이 서양문명을 대표하는 미국과 세계최종전쟁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로 자원이 풍부한 대륙, 즉 만주와 몽골지역을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고자 관동군 참모를 자원하였고, 여러 참모와 더불어 본국 정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군대를 동원하여 만주 전역을 장악했다.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시기에는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총리가 있었다. 그는 베르사유 평화조약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맹 등의 국제질서가 미국 및 영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구축한 것이며, 일본은 '가지지 못한 국가'로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및 미

**일본군의 공습 후 불타고 있는 미국 군함**

국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히로히토(裕仁) 일왕도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제국이 전쟁을 일으킨 두 번째 요인은 국가 차원의 전쟁계획과 군사력 강화이다. 1890년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당시 육군과 해군은 전장이 될 한반도와 중국의 지리를 조사하고, 한반도의 남·서해를 장악할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작전을 계획하였다. 또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은 무라타 소총을 자체 개발하였고, 해군은 북양함대에 필적할 함선 획득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태세 강화가 대중 개전의 정치적 결정을 뒷받침했다. 러일전쟁이 임박해서는 육군은 사단 수를 늘리고, 해군은 미카사를 포함한 1만 2천 톤급 전함 6척과 장갑순양함 6척을 필두로 한 소위 6·6함대를 구축하여 러시아 발트 함대와 결전을 준비했다.

만주사변 이후에는 국제연맹, 워싱턴 및 런던 해군군축조약 등을 탈퇴하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제국 국방방침」의 군사전략을 입안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태평양함대에 대항하기 위해 6만 톤급 전함 2척을 포함한 해군 전력 증강을 추진하여 중일전쟁 및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비하는 군사태세를 갖추었다.

일본제국이 전쟁을 일으킨 세 번째 요인은 국제기구와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미국·영국과 더불어 승전국이 된 일본은 국제연맹 이사국 지위를 부여받고, 워싱턴 및 런던 해군군축조약을 체결하였다. 만일 일본이 국제기구와 군축 규범을 준수했다면 중일전쟁이나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국제연맹에서 이탈하였고, 해군군축조약도 폐기하여 독일과 더불어 1930년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가 되었다. 대외정책 및 군사 활동을 규제한 국제규범이나 기구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군국주의의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이같이 일본제국이 전쟁을 일으킨 세 가지 조건, 즉 팽창적이고 공세적인 정치·군사 지도자들, 국가 차원의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군사력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 규범 준수 여부가 향후 일본의 안보 정책뿐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대외정책을 판단하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21세기 일본의 안보 정책 및 안보 전략 문서 평가

그렇다면 현대 일본의 안보 정책, 그리고 이번에 공표된 일본의 안보 전략 문서들은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비추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본은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과 1946년 평화헌법 제정에 따라 육·해·공군 전력 보유가 금지되었고, 국가의 대외정책으로 전쟁 수단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된 이후에도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위대의 전력 보유 수준이나 대외활동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랐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일본 정부가 표방해온 소위 '전수방위의 원칙',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방위비 GDP 대비 1% 이하의 규범',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 '무기 수출금지 3원칙', 최소한의 자위대 전력만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며 그에 부합하는 수준의 국제 안보 활동에는 미일동맹 및 유엔의 범주에서 참여한다는 소위 '보통국가론' 전략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보통국가론'에 대해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의심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일본은 일본제국의 군국주의와 달리 과거사 반성을 토대로 유엔이나 NPT, 미일동맹 등 국제기구와 규범 준수를 명확히 하면서 대외정책과 안보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군국주의나 평화국가 담론과 구별되는 새로운 제3의 국가전략 제시라고 평가한다.[3]

'보통국가론'의 전략 담론은 자민당 정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나 아베 신조(安倍晉三) 등에 의해 실제 안보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이후에는 「방위계획 대강」등에 의해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동적 방위력' 및 '통합 기동 방위력'을 거쳐 현재 '다차원 통합방위력'이 자위대 전력 증강의 표준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2008년에는 우주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변화시켜 안전보장 목적을 위한 정찰위성 발사 등 우주 개발이 가능해졌다. 2014년에는 각의 결정을 통해 그동안 행사를 보류해온 '집단적 자위권'을 소위 '존립 위기 사태' 발생 시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또 '무기 수출금지 3원칙'을 변경하여 각의 검토를 거쳐 동맹국은 물론 우방 국가들과 무기를 공동개발할 수 있으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장비 이전 3원칙'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8년에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1만 9천 톤급의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면서 항모, 전략폭격기, 대륙간 탄도탄 등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에도 부분적으로 변경을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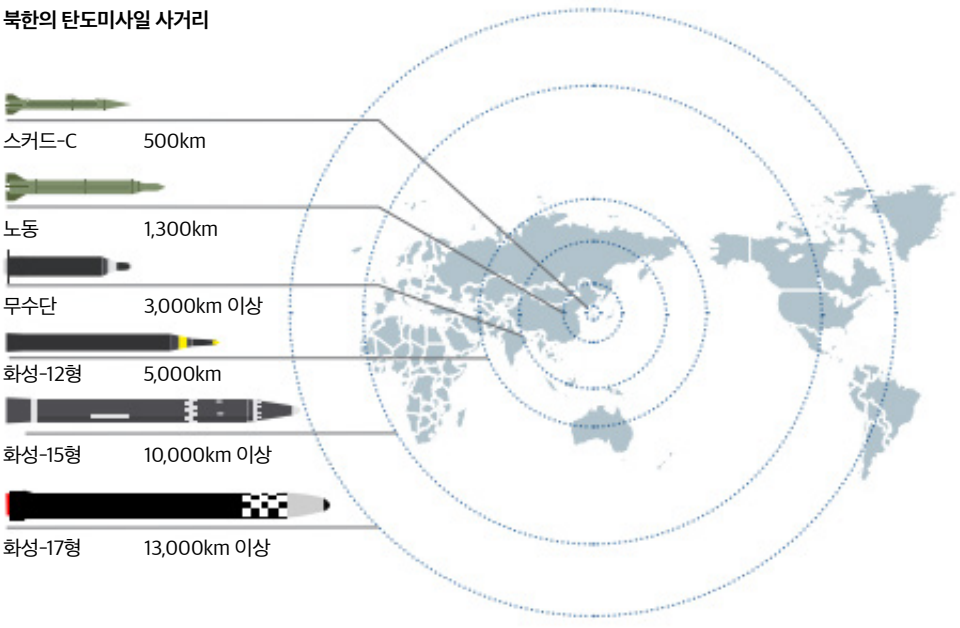
2022년에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제시된 주요 내용들도 '보통국가론'의 전략 담론에 따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일본의 안보 전략 및 군사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문서들에는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과 현상 변경적 대외정책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에 의해 국제 안보 정세가 '전후 가장 엄중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서에서 지난 30년간의 탈냉전 시기는 이미 종료되었고, 향후 10년이 미국 안보 정책에서 중요한 변곡점(inflectuion point)이 될 것으로 단언한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3** 박영준, 2008. 『제3의 일본』, 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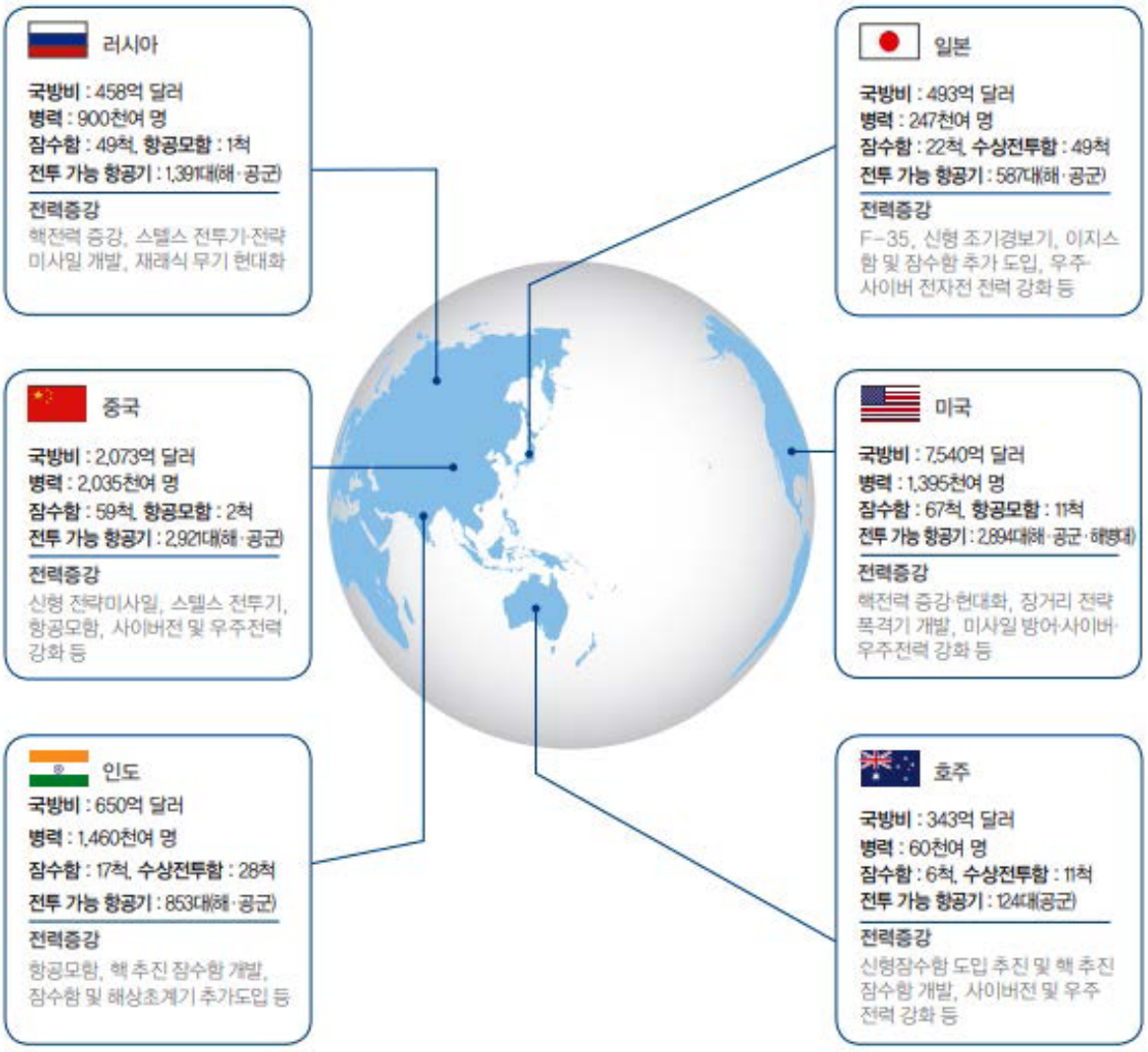
이 같은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일본 전략서들은 3가지의 전략적 어프로치, 즉 일본의 국력과 방위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동지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과의 제휴 등을 심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일본의 방어체제 및 방위 능력 강화와 관련한 것이다. 그 세부 항목의 하나로 상대 국가가 탄도미사일 등을 사용하여 일본에 무력 공격을 가할 경우, 스탠드오프 능력을 이용하여 상대의 영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반격 능력 보유를 최초로 명시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육상자위대는 기존에 운용하던 12식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180km에서 1,000km로 늘리고, 미국으로부터 사정거리 1,250km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여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탑재하고, 사정거리 900km의 노르웨이제 공대지 미사일을 획득한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 외에 통합 방공미사일 체제 구축, 무인 무기체계의 구축, 우주 및 사이버, 전자파 등을 망라한 영역 횡단 작전 능력 강화 방침도 표명하였다. 소요되는 방위비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방위예산을 기존의 5조 엔 수준에서 8.9조 엔 수준으로 증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하였다. 또 일본의 안보 체제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육·해·공 자위대를 통할하는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유사시 국토교통성 예하의 해상보안청을 방위성이 지휘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동지 국가들과의 제휴 심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전략서들이 쿼드에 참가하는 호주와 인도에 더해 한국 및 유럽 국가들을 대상 국가로 설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8년 「방위계획 대강」에서 안보협력 대상으로 한국을 동남아 국가들보다 후순위로 둔 것과 비교하면 향후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및 안보협력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군사력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22」(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2년 2월)

## 4.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이번 일본의 안보 전략서들이 '반격 능력' 보유 표명, 방위예산의 GDP 대비 2% 수준까지 증액 등 새로운 안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전환이 일부 정치가들이나 언론이 주장하듯 전전(戰前) 시기의 군국주의로 회귀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일본제국의 군국주의와 전쟁을 일으킨 조건들에 비추면, 현대 일본 정치 세력들이 팽창적이거나 공격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차원에서 공격적인 군사전략이나 군사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유엔이나 NPT, 미일동맹 등 현상유지형 국제기구나 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다. 21세기의 일본은 군국주의의 일본제국이나 냉전 시대의 평화국가형 일본과는 다른 제3의 길, 즉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자신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보통국가'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안보 전략서들에 표명된 전환은 1990년대 이후 현대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보통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미국과의 동맹하에 해·공군력 및 핵전력을 증강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전개하는 중국에 대한 억제,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여 한국과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를 한국은 국가이익이나 안보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북한의 공세적 군사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자체적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일동맹과의 연계는 불가피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안보협력을 확대한다면,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는 미일동맹을 매개로 하여 한국 안보나 한미동맹에도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과거사를 기준으로 삼아 일본의 변화를 군국주의의 프레임에 가두고 편협하게 해석할 경우, 중요한 안보 자산을 상실할 수 있다.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 개별 국가의 정세 및 국제 안보의 구조도 냉철하게 인식해야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안보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박영준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일본 외교·안보 및 동북아 국제관계를 전공하였다. 저서와 편저로는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2021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저술상), 『21세기 한반도 평화연구의 쟁점과 전망』(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 도서)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제2호** 시진핑 시기 혐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비판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제35호**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톺아 읽기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종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

**제56호** 한중일 협력의 역사

**제57호**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

**제58호** 몽골인의 눈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

**제59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제60호**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제61호** 거란국[遼]의 국가 성격과 외교 전략